

## 연간 50억씩 쓰는 光發研, 광주 '싱크탱크' 맞나

올 수행 정책과제 77건...내용·건수 빈약  
매일 발표 경제동향은 자료 짜깁기 수준  
광주발전 비전 제시 못해...타지역과 대조

광주시에 대한 정책지원 등이 설립  
목적인 광주발전연구원(이하 광발연)  
이 매년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 
도 '싱크 탱크'(Think Tank) 역할을  
제대로 못해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 
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그나마 내놓  
는 정책연구는 광주발전 비전과 동떨  
어진데다, 매일 한차례씩 발표하는 경  
제동향자료 등은 타 기관의 자료를 짜  
깁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.

2일 광주시와 (재)광발연에 따르면  
광발연은 지난 2007년 7월 광주·전남  
발전연구원에서 분리된 이후 광주시  
의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다.

올해만 시 출연금 23억원과 수탁과  
제(연구용역) 27억8800만원 등 50억  
8800만원이 운영 예산 등으로 쓰였다.

근무인원은 박승주 원장을 비롯한  
연구직 16명, 일반직 7명 등 24명이다.  
단순 계산해서 1인당 2억원대의  
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.

특히 박 원장은 광주시 산하 출자·  
출연기관장 30명 가운데 가장 높은 1  
억29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.

광발연은 올해에만 기본과제 16건,  
정책지원과제 24건, 포커스 광주 18  
건, 수탁과제 19건 등 모두 77건의 정  
책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, 매일 '광  
주경제동향'과 분기별로 '광주연구'  
라는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.

하지만, 정책 연구과제 77건 중 광  
주 발전의 비전 등을 제시한 연구물  
은 찾아보기 힘들다. 특히 문화전당  
유치 등으로 문화와 관련된 연구과제  
도 쏟아지고 있지만, 광발연이 이를  
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일부 연구  
과제를 타기관에 위탁하는 현상까지  
벌어지고 있다.

또 광발연이 내놓은 정책과제 중  
일부는 광주와 연계성이 희박했으며,  
광주시에서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 
긴급하게 요청하는 정책지원과제 중  
일부는 수행조차 못했다.

최근 광발연이 내놓은 연구과제 3

건의 주제(제목)만 보더라도 '청소년  
주말 프로그램 에이전트 육성'을 통한  
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  
확대 방안, '창의적 집단지성 활용을  
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', '문화단  
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
연구' 등 사실상 광주라는 지역과 연  
계성을 찾기 힘든 결과물이다.

이와 관련, 광발연측은 다른 지역  
에서 다루지 않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 
내놓으라는 박승주 원장의 지시에 따  
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.

상황이 이런데도 박 원장은 내무  
단속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 
특정 선거캠프 모임에 얼굴을 내미는  
등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서 입살에  
오르고 있다.

반면 인근 전남발전연구원의 경우  
학술적 연구보다는 지역이 필요로 하  
는 연구 과제 수행을 목표로 연구 결  
과물을 내놓고 있으며, 또 정책과도  
연동돼 곧바로 반영되고 있다. 연구인  
력(17명)도 광주와 비슷하지만, 올해  
정책연구과제만 120여건을 수행했다.

영남권 자치단체들이 운영중인 발  
전연구원도 전남발전연구원처럼 지  
역 정책 발굴 위주로 운영중이다. 특  
히 지역의 미래를 이끌 정책 제안에  
집중하는 모습이다.

부산발전연구원은 최근 '영남권 경  
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'이란 운영결  
과를 발표했으며, 이를 바탕으로 대  
구·경남·북·부산·울산 등 5개 광역단  
체장이 모여 '2020년 영남권 경제공  
동체 실현'을 위한 의견 조율을 했다.

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수도권 불  
락을 확산 대처를 위한 '대구경북통  
합생활권협약체'를 구성한 뒤 인근 5  
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하는 '영남경  
제공동체'를 출범시키는가 하면 이를  
내년 지방선거의 공동 의제로 제안하  
는 등 지역이슈를 선도하는 역할까지  
담당하고 있다. <2면에 계속>

/박진표기자 lucky@kwangju.co.kr



안개에 물린 광주 상무지구

2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가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.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 광주·전남 내륙지역은 밤 사이 복사냉각(지표면의 열이 날아가며 차가워지는 현상)의 영향으로 오전에 안개 낀 곳이 많겠다. /김진수기자 jeans@kwangju.co.kr

## 영남 F1 내년 개최 여부 이번주 판가름

적자 감축 대책 없어 전남도의회 예산 심의 진통 예고

FOM과 협상 난항...내년 일정 한국대회 포함 불투명

F1 코리아 그랑프리 내년 개최  
여부가 이번 주에 판가름 나는 등 지  
속 개최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  
인다.

내년 대회 개최에 제동을 걸고 있  
는 전남도의회의 F1 예산 의결을 앞  
두고 있고, 전 세계 각국을 돌며 열리  
는 내년 F1 대회 전체 일정에 한국 대  
회가 포함될지 여부도 결정나기 때문  
이다.

전남도의회는 2일 "전남도가 F1대  
회 개최권료(출연금)로 편성한 100  
억원(상임위 70억원 의결)의 예산에  
대해 오는 4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 
의결한다"고 밝혔다.

도의회는 올 초 F1 대회 적자를  
150억원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했지  
만 지난 10월 대회 적자가 180억원에  
달하자 최근 상임위에서 내년 F1 예  
산을 30억원 삭감해 70억원만 의결했  
다. 애초 약속보다 30억원의 적자를

더 냈으니 대신, 내년 예산 중 30억원  
을 삭감한 셈이다.

또 도의회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 
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예결위에서  
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 
때문에 내년 F1 대회 예산 반영 과정  
에 진통이 예상된다.

내년 대회 일정이 아직까지도 명확  
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다. 전남도  
는 현재 F1 운영사인 F1매니지먼트  
(FOM)와 내년 4월 대회 개최 여부를  
논의하고 있고, 이 일정은 오는 4~5  
일께 확정된다.

만약, 내년 F1 한국대회 일정이 4  
월로 결정된다면 전남도는 5개월 만  
에 대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  
간상으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해진다.

FOM 측이 이에 내년 대회 일정에  
한국대회를 넣지 않을 경우도 배제할  
수 없다. 전남도와 내년 대회 개최권  
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, 4월 대

회 개최 가능성도 낮아 아예 한국대  
회를 제외할 수도 있다.

또 7차례 치르기로 한 FOM과의 계  
약을 파기하고, 올 4회 대회를 끝으로  
아예 대회를 중단하거나 내년 대회를  
건너뛰자는 전남도 내부 의견도 제기  
되고 있다. 해마다 적자가 쌓이고 있  
기 때문에 F1 대회를 중단하고, 대신  
다른 자동차 대회를 유치하거나 내년  
4월에는 대회를 치를 수 없으니 아예  
포기하자는 것이다.

내년 전남도지사 선거를 준비하고  
있는 일부 후보들이 F1 지속 개최에  
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 
전남도로서는 부담이다.

/오광복기자 kroh@kwangju.co.kr

**2014 학부 신입생모집**  
정시모집  
2013년 12월19(목)~23일(월)  
광신대학교  
입학문의(062)605-1114

## 朴대통령 문형표 복지 임명 강행

황천현 감사원장·김진태 검찰총장도...민주 강력 반발

박근혜 대통령은 2일 황천현 감사  
원장, 김진태 검찰총장, 문형표 보건  
복지부 장관을 각각 공식 임명했다.

하지만, 이날 임명장 수여는 야당  
의 반발을 뚫고 여야 지도부 간 '4차  
회담'이 이뤄지고 있는 시간에 강행  
돼 여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  
망이다.

애초 대통령은 이날 안동시에서 열  
린 경상북도 업무보고와 경주시 석굴  
암 보수·정비 현장방문 후 일정이 없  
었다. 그러나 청와대에 복귀하자마자  
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전격적으로 이  
들을 임명했다.

박 대통령은 임명식 직후 이어진  
환담에서 김 총장에게 "어떤 경우라  
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 
를 부인하는 것, 이것에 대해서는 아  
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 
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  
야한다"고 당부했다.

또 황 감사원장에게는 "그간 쌓여  
온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, 이런 것을  
바로잡으려면 당연히 공공부문부터  
바로잡아야 한다"며 "공기업의 방만

한 경영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, 공적  
의 기강해이러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 
확실히 바로잡고, 그렇게 해야만 앞  
으로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 
같다"고 말했다.

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새누리  
당이 황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  
안을 단독 처리한 후에도 정치적 여  
파를 고려해 임명 시기를 저울질해  
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하지만,  
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  
기며 대처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 
정상화를 위해 더는 이들의 임명을  
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  
다.

야당은 즉각 반발했다. 민주당 박  
용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 
"불통정권의 끝을 보여주는 것"이라  
고 비판했다.

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브리  
핑에서 "이는 명백히 박 대통령이 국  
회를 무시하는 처사"라며 "이러고도  
박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출신이라고  
말씀하실 수 있느냐"고 지적했다.

/박지경기자jpark@kwangju.co.kr

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!

자식은 부모님께 쉽게 기댈 수 있어도  
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기 어렵다고 합니다.  
자식이 보험이라는 말이 사라진 시대인데요.  
이제 노후 준비는 부모와 자녀가  
서로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.

국민연금 은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이  
부모님 세대에게 모아 드리는 정성입니다.

앞선 세대와 이후 세대들이 서로 도와가며  
계속 손을 맞잡아 간다는 믿음,  
그 중심에 국민연금이 있습니다.

### 100세 시대 동반자 평생월급 국민연금

**노령연금** |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시면  
만 61~65세 이후 평생 받습니다.

**유족연금** | 가입자·수급자가 사망할 경우,  
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.

**장애연금** | 질병,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 
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.

**행복 파트너 1355 국민연금 콜센터**